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600여명, 자원해서 당원 가입"

"혁신 경쟁으로 새 지방자치 시대 열 것"

다가오는 2026년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독주 시대에 안주하던 전북에서도 조국혁신당과 경쟁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에서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당 위원장 정도상, 강동원 전 국회의원, 최영심 전 도의원, 김광중 현 임실군 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수 전북도당 정책실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당원 모집에 자발적으로 당원 6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동원 의원은 "오늘 우리는 전북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을 떠나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진정한 전북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정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의 변화가 더딘 것은 30년 넘게 오랜 일당 독재체제에서 정치가 정체되어 온 결과이므로 정치적 경

쟁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 진보정당의 정당들이 전북에서 활발히 경쟁한다면, 전북 정치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영심 전 전북도 의원은 이번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이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정당시스템과 정치문화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전북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도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00명 입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 최영심 전 도의원 등 참여 향후 지방선거서 민주당과 경쟁체제로 치러질 전망

의 의원인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제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과 함께 깨끗

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0월 16일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다"고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말하며, "전국에 조국혁신당원이 20만여 명이며, 전북에서도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장사 하지 않는 투명한 공천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전북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지지세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에서 비례대표 지지세가 더불어민주당의 37%보다 높은 45%의 득표를 해 고부패 잇따가 요즈음 다소 참채기를 겪고 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 표를 행사해 조국혁신당이 많은 지지세를 얻었지만 다음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한 표만을 행사하기에 다른 양상을 띠 것"이라고 하며, "과거와 달리 일당 독주로 인한 경쟁 구도 없이 당의 공천으로 후보만 확정되는 식으로는 당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경찰청 중심 지역 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발의한 '경찰청 중심 지역 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중심 지역 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서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 지역 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심 지역관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심 지역 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 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 지역 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중심 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 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족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더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이만호 기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립의회 사업에 대한 일부개정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규정 신설 △의견 개진에 대해 신설 △지원 및 지도에 대해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만호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도내 국회의원 2명 '법정행'

10일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총 2명의 국회의원 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시장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신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학생정치 사용 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지만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지난 1월 9일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훈사 사무실 앞에서 보훈설계사를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포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시장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전북자치도의회, 도 첨단전략산업지원 특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오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10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오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민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등 11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전폭적인 육성

흐름과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지원·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충북, 경북과 함께 '낙후벨트'로 취급받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16위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절실한 산업으로, 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완벽하게 갖춘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익산 떡지순례 필수코스가 우리집에 온대!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을 만나보세요

ese whipped cream rice



'전북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민주 이성운 의원, 대광법 개정안 발의... "범도민추진위와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하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성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곧장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을 위한 '이현'이라는 대광법 문제를 전북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했다.

우선, 지난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주 시내에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팸플릿 수십 개를 내 걸었다. 언론 기고 등으로 대광법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데도 적극 노력했다.

8월 28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8월 30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도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임완 전라일보 사장,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가 시민 260여 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특히 범도민추진위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지문을 맡게 된다. 시민 2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광법 개정 추진은 물론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 실무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8일에 새로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 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광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북은 연간 1.94조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이 1.8조 원, 울산은 1.03조 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혼잡비용이 적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도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한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전북은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성운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0일 전북자치도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리계획 대상지 3곳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금마 및 장수 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를 찾아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축예정 부지가 출동 여

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지인지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이후 전북도립미술관을 방문해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이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1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점검했다.

한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차전지 연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등 4건이다. /이만호 기자